Ⅲ.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

(1) 검토 배경 125
(2)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 현황 125
(3) 자영업의 구조적 변화 128
(4)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133
(5) 자영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방향 139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1]

- **(자영업 현황)**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정책 목적 및 통계에 따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최근 10년간 산업 측면에서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수(24년 879.7만개)는 증가하였으나 총사업자 대비 비중(86.7%)은 하락하였다. 고용 측면에서의 자영업자 수(25년 645.1만명)는 감소하였으나, 총취업자 대비 비중(22.4%)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25년 OECD 통계 대상 31개국 중 6위)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기간중 크게 증가한 뒤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26년 1/4분기말 1,095.5조원(차주 수 320.1만명)으로 전체 금융권 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의 28.5%를 차지하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익스포저로 평가된다.

- **(자영업의 구조적 변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은 시장·산업·연령·재무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코로나19 전후로 이러한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업종별·규모별 경영실적 차별화가 나타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부동산업 자영업자 수와 대출이 집중되면서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연령구조 측면에서는 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층 진입 감소와 고연령 자영업자 부채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금융여건 변화의 영향으로 소득 측면의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취약차주 비중이 상승하였다.

-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이러한 자영업 부문의 구조 변화는 다음과 같은 금융안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패턴 변화로 영세 자영업자 및 일부 대면서비스업의 부실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동산업, 특히 부동산 임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상환여력이 약화되어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 고연령 자영업자는 소득 기반이 취약한 반면 부채 부담이 높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여건 악화시 비은행권으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향후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금융여건이 긴축적으로 전환될 경우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 **(정책 대응방향)** 향후 자영업에 대한 정책대응은 취약부문 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구조적 취약성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과 사업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선별적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병행하고,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차주는 정상화를 지원하되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체는 폐업, 전직 및 재취업 지원과 연계하여 부실의 장기 이연을 방지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적응력과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경영역량 제고를 지원하되, 단순한 온라인 진출보다 실제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사업모델 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경제 전체의 신용공급 측면에서도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자금배분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은 대출심사능력 제고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취약부문에 대한 익스포저 누적 방지에 힘써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한편, 자영업 정책을 창업·운영·폐업 단계별로 금융지원, 산업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자영업 부문의 복원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본고는 편도훈 · 손희주(안정분석팀), 조광래 · 고성빈(금융안정연구팀)이 작성, 이정연(금융안정기획부장) · 조규환(금융시스템분석부장) · 문용필(안정분석팀장) · 조은아(금융안정연구팀장)가 검토하였다.

(1) 검토 배경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은 오랜 기간 산업, 고용 및 금융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는 전체 기업의 95.2% 및 전체 종사자의 45.9%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전체 기업 매출액의 17.4%에 그치는 등 대부분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경기 및 구조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자영업의 높은 경제적 비중과 구조적 취약성은 자영업 부문의 변화가 고용, 소비 등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표 III-1).

표 Ⅲ-1. 국내 자영업자[1]의 경제적 비중(2023년)

(만개, 만명, 조원, %)

	기업수	종사자수[2]	매출액
전체 (a)	831.0	2,376.7	7,359.1
소상공인 (b)	790.7	1,090.0	1,277.6
비중 (b/a)	**95.2**	**45.9**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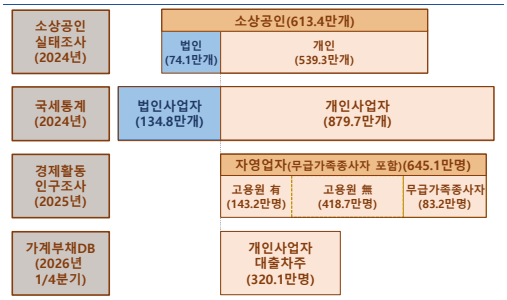
주: 1) 기업통계등록부(국가데이터처)상 소상공인 기준
2)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기준으로, 사업체 대표, 가족종사자, 상용직 및 임시직을 모두 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본통계)

한편, 최근 10년간 자영업을 둘러싼 환경은 시장, 산업, 연령 및 재무 등의 측면에서 크게 변화해 왔으며, 코로나19를 전후로 이러한 움직임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의 수익성, 자금조달 여건 및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자영업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도 연계될 수 있어 금융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현황과 최근 10년간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자영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금융안정 측면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2)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 현황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정책 목적과 활용 통계에 따라 소상공인[2], 개인사업자[3], 자영업자 등 다양한 용어와 개념으로 정의되며, 데이터 원천별로 포괄 범위에 차이가 존재한다(그림 III-1). 본 장에서는 소상공인실태조사와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사업체 단위의 자영업자(산업 측면)를,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취업자로서의 자영업자(고용 측면)를, 가계부채DB를 활용하여 대출 차주로서의 자영업자(금융 측면)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영업의 규모와 금융부채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림 Ⅲ-1. 자영업자 관련 개념별 규모[1]



주: 1) 소상공인실태조사 및 국세통계는 사업체(만개),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가계부채DB는 개인(만명)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2]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소기업(小企業)으로 정의하며, 조직 형태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된다. 이때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기업을 의미하는데, 소기업에 대한 평균 매출액 기준은 세부 업종에 따라 제조업은 15~140억원 이하, 서비스업은 15~120억원 이하, 비제조업(서비스업 제외)은 80~120억원 이하로 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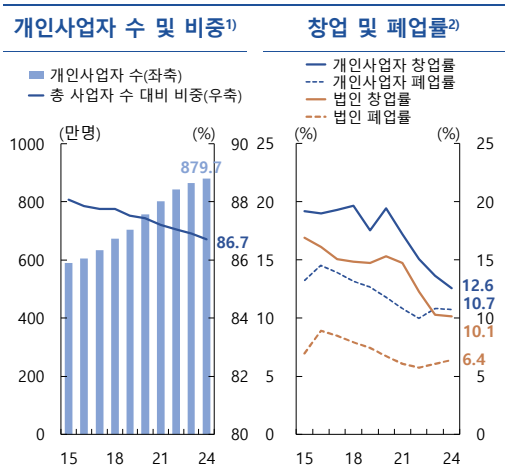
[3]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개인 명의로 등록한 대표자가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라는 측면에서 법인사업자와 구별된다.

가. 자영업자 규모 및 추이

산업 측면에서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수는 증가하지만 총사업자 대비 비중은 하락

먼저 산업 측면에서의 자영업자 규모를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2024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은 법인(74.1만개)과 개인(539.3만개)을 모두 포함하여 총 613.4만개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말 국내에 등록된 전체 개인사업자는 총사업자(1,014.5만개)의 86.7%에 해당하는 879.7만개에 이르고 있다.[4] 개인사업자 수는 2015년 590.4만개에서 2024년 879.7만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중 전체 사업자(법인+개인) 중 개인사업자의 비중은 88.1%에서 86.7%로 소폭 하락하였다. 통상 개인사업자의 창업률과 폐업률이 모두 법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나, 창업률보다 폐업률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체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해 온 것으로 보인다(그림 III-2).

그림 Ⅲ-2. 산업 측면에서의 자영업자 추이



주: 1) 연도별 총 사업자(법인+개인) 수 대비 비중
2) 전년 사업자 수 대비 당해 창업 및 폐업 사업자 수 비율
자료: 국세청

고용 측면에서의 자영업자 비중은 과거보다 하락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

한편 고용 측면(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기준)에서의 자영업자[5] 규모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자영업자 수는 2015년 677.6만명에서 2025년 645.1만명[6]으로 다소 감소하여 총 취업자 수 대비 비중이 25.9%에서 22.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 기간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1.3만명에서 418.7만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상승(59.2% → 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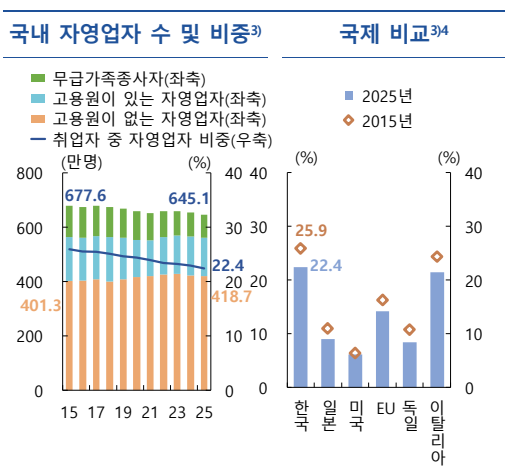
[4] 소상공인실태조사상 소상공인 수와 국세통계상 개인사업자 수는 ① 통계 편제 방식, ② 규모 및 업종 등 포괄범위, ③ 법인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표본 조사 결과를 통해 전수를 추정하는 방식인 반면, 국세통계는 등록된 개인사업자 전수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상공인실태조사에서는 상시근로자 기준(5~10인 미만)과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고 주로 11개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하나, 국세통계에서는 이러한 규모나 업종에 제한이 없어 매출 규모가 큰 대형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한편 소상공인에는 정의상 소규모 법인이 포함되나, 개인사업자에는 법인이 제외된다.

[5] 고용 측면에서의 자영업자는 남에게 고용된 임금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통상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고용원 없이 혼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일정 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하는 사람)를 합친 비임금근로자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고용통계상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종사상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무등록 자영업자와 일부 법인 대표도 포함된다.

[6] 다수의 사업체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통계에서는 1명으로 집계되지만 국세통계에서는 등록된 사업체 수만큼 계수되어, 취업자 중 자영업자 수(25년 645.1만명)는 개인사업자 수(24년 879.7만개)보다 통상 적다.

하였다. 한편 국내 자영업자 비중[7]은 과거 대비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U(14.3%), 일본(9.0%), 미국(6.2%, 24년 기준)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그림 Ⅲ-3).

그림 Ⅲ-3. 고용 측면에서의 자영업자[1] 추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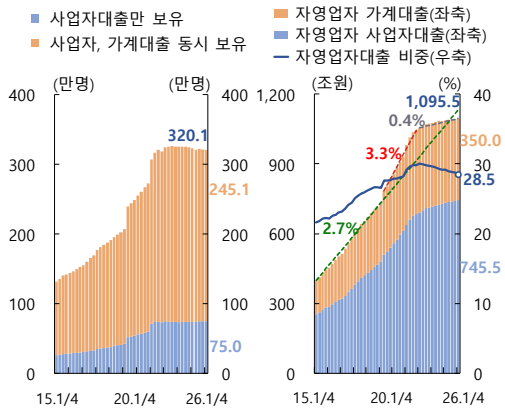


주: 1)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2) 각 연도별 연중 평균 기준
3) 총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
4) 2015년 및 2025년 기준(단, 미국은 2024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나. 자영업자 금융부채 현황

한국은행 가계부채DB(약 235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현황을 추정한 결과, 2026년 1/4분기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차주[8] 수는 320.1만명으로, 2015년 1/4분기말 131.8만명에서 코로나19 기간중 크게 증가하여 2023년 3/4분기말 정점(325.9만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2015년 1/4분기말 399.8조원에서 2026년 1/4분기말 1,095.5조원(개인사업자대출 745.5조원, 가계대출 350.0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금융여건 완화 및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평균 증가율(전기대비)이 2012년 이후 2020년 1/4분기까지 2.7%에서 2020년 2/4분기 이후 2022년말까지 3.3%로 상승하였다가 2023년부터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시 0.4%까지 크게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이 전체 금융권 대출(금융기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합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4분기말 21.6%에서 2023년 1/4분기말 30.0%까지 상승하였다가 2026년 1/4분기말 28.5%로 소폭 하락하였다(그림 III-4).

그림 Ⅲ-4. 자영업자 차주 수 및 대출 추이



주: 1) 점선은 20년 1/4분기말과 22년 4/4분기말 기준으로 전후 세 기간중 평균 분기 증가율(기하평균 기준)
2) 금융기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가계신용통계 기준)을 합산한 총대출 대비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가계신용통계),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영업은 산업, 고용, 금융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7] 2025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self-employment rate)은 22.4%로 OECD 통계 대상 31개국 평균(16.5%)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콜롬비아(45.6%), 멕시코(31.0%), 튀르키예(28.2%), 그리스(27.9%), 코스타리카(25.4%)에 이어 6위를 기록하였다. 단, 칠레(23.8%, 24년 기준)와 미국(6.2%)은 6월 9일 현재 2025년 기준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8] 한국은행은 통상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 차주로 식별하며, 이들이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하여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한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업자 명의의 개인사업자대출과 차주 개인 명의의 가계대출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있으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고 영세 사업체 비중이 높아 경기 및 구조 변화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특히 자영업 관련 대출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자영업 부문의 재무상태 변화는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다.

(3) 자영업의 구조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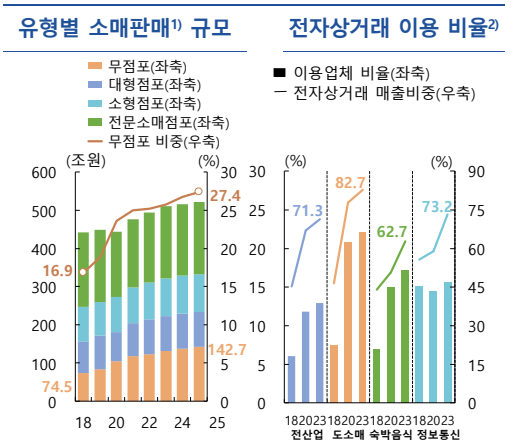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의 중요성과 취약성을 고려할 때, 자영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자영업자의 경영행태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10년간[9] 나타난 자영업의 구조적 변화를 시장, 산업, 연령 및 재무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시장구조 변화

비대면·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온라인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가계의 소비패턴에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소매판매 중 온라인쇼핑을 포함한 무점포 판매액은 2018년 74.5조원에서 2025년 142.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소매판매에서 무점포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6.9%에서 2025년 27.4%로 상승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중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들의 전체 매출액 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비중 역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전통적인 대면서비스 업종에서도 전자상거래 활용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로 인해 온라인 판매 활용능력 등이 자영업자들의 경영실적을 차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그림 III-5).

그림 Ⅲ-5. 무점포 판매 및 전자상거래 이용 추이



주: 1) 인터넷쇼핑, 홈쇼핑, 방문 및 배달판매 등
2) 매출비중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업체 제외
자료: 국가데이터처(소매판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실태조사)

업종별 경영성과 차별화

이러한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는 자영업의 비용구조 변화와 함께 수익성 등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영업은 원재료비, 보증금 및 월세 등 기존 영업비용 부담[10]이 높아지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이용비용[11] 등 새로운 비용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소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소매업, 음식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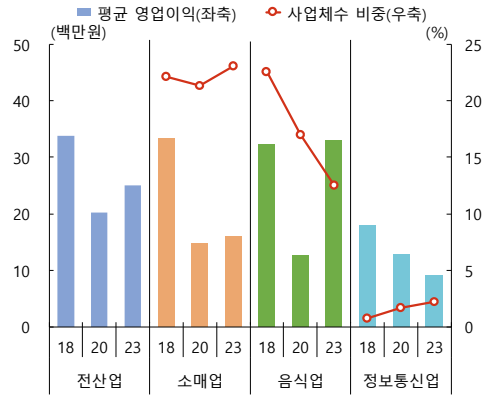
9 본고에서는 최근 10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를 분석 범위로 하였으나, 통계의 가용 기간이 짧거나 기간중 큰 폭의 표본 및 조사 방식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대상기간을 축소하여 분석하였다.

10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자영업자는 업종내 경쟁심화, 원재료비, 보증금 및 월세 등에서 2018년 대비 더 많은 업체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11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업 업체에서 지불하는 월평균 배달앱 이용비용은 2018년 24.7만원에서 2023년 39.2만원으로 58.7% 상승하였다.

대면서비스업에서는 소비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는[12] 반면 자영업의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이 팬데믹 당시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여전히 전산업 평균을 하회하며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이다. 반면 음식업의 경우 평균 영업이익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업종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사업체 수 비중은 감소하였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온라인 소비 확대 흐름에 따라 사업체 수 비중은 상승하였으나 평균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그림 III-6).

그림 Ⅲ-6.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 및 사업체 수 비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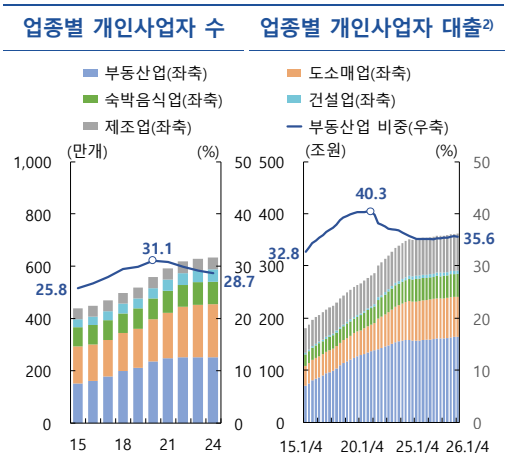
주: 1) 전체 사업체 수 대비 해당 업종 사업체 수 비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실태조사)

나. 산업구조 변화

높은 부동산업 종사 및 대출 비중

개인사업자 수와 개인사업자대출(국내은행 기준)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두 지표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동산업 개인사업자는 2015년말 152.1만개에서 2024년말 252.4만개로 늘어났으며, 전체 개인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말 25.8%에서 2020년말 31.1%까지 상승하였다가 2024년말 28.7%까지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이들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개인사업자대출은 2015년 1/4분기말 70.3조원에서 2026년 1/4분기말 163.5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4분기말 32.8%에서 2019년 3/4분기말 40.4%까지 상승한 후 2026년 1/4분기말 35.6%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II-7).

그림 Ⅲ-7. 주요 업종별 개인사업자 수 및 대출 비중[1)]



주: 1) 연도별 전산업 대비 부동산업 개인사업자 수 및 대출 비중
2)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
자료: 국세청,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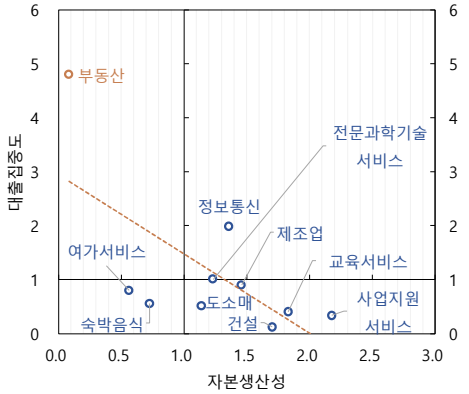
부동산 집중에 따른 자금배분 효율성 저하

이처럼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업 대출이 높은 비중을 지속하는 것은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영

[12] 코로나19 전후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와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조사 대상 대기업을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023년 평균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도소매업 8.4%, 숙박음식점업 145.5%를 기록하였다.

업자의 대출집중도[13]와 자본생산성[14]을 업종별로 비교한 결과, 부동산업, 여가서비스업, 숙박음식업의 자본생산성이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업종 중 부동산업은 대출집중도(2025년 4/4분기말 기준 4.8)가 특히 높은 수준을 보여, 생산성에 비해 대출이 집중적으로 배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III-8).

그림 Ⅲ-8. 자영업자의 산업별 대출집중도[1]와 자본생산성[2][3] 간 관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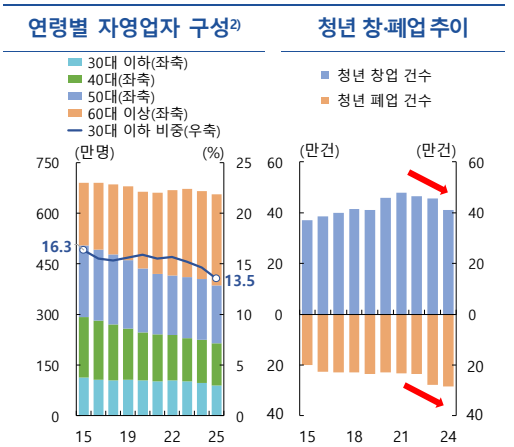
주: 1) 산업별 소상공인 영업이익 비중(분모) 대비 산업별 개인사업자대출(국내은행 기준) 비중(분자)의 비율
2) 소기업 산업별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 기준
3) 각 산업의 자본생산성을 전산업 기준으로 지수화
4) 자료 제약으로 자본생산성은 2024년말, 영업이익은 2023년, 개인사업자대출은 2025년 4/4분기말 기준 수치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시산(기업경영분석,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다. 연령구조 변화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 감소 및 비중 하락

연령별로는 자영업 시장 내 청년층 비중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이하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12.7만명에서 2025년 88.7만명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자영업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6.3%에서 2025년 13.5%로 하락하였다.[15] 이는 청년층 인구 감소, 자영업 경영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청년층의 신규 창업 건수는 코로나19 시기에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다시 감소하여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폐업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청년층의 자영업 시장 이탈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III-9).

그림 Ⅲ-9. 청년층[1] 자영업 진입 추이



주: 1) 30대 이하(15~39세)
2) 각 연도 8월 기준(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자료: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국세청

고연령 자영업자 수 및 금융부채 비중 확대

반면 최근 10년간 60세 이상의 고연령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84.2만명에서 2025년 269.7만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자영업자 중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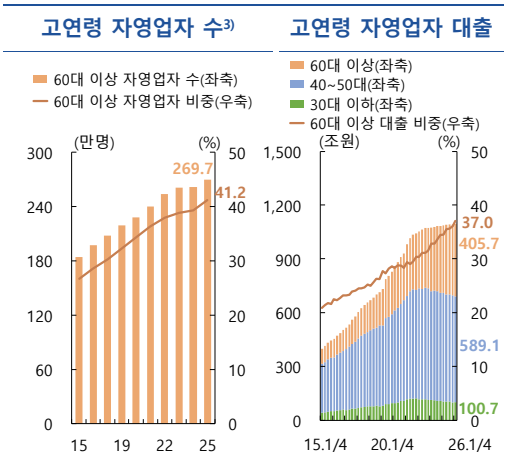
[13] 기업부문 대출집중도는 기업신용의 산업별 배분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통상 특정 산업의 산업별 GDP 비중(분모)과 산업별 대출 비중(분자)을 비교하여 산출하며, 동 지표가 1보다 크면(작으면)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적은) 대출이 배분되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데이터 제약으로 인해 산업별 GDP 비중 대신 소상공인의 업종별 영업이익 비중을 분모로, 국내은행의 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을 분자로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산업별 대출집중도를 산정하였다.

[14] 자영업자의 자본생산성은 기업경영분석 통계상 소기업의 산업별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을 대리변수(proxy)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5] 경제활동인구 내 30대 이하 청년층의 비중이 2015년 37.4% → 2025년 32.1%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체 청년층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11.7% → 2025년 9.7%로 하락하였다.

연령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6.7%에서 41.2%로 14.4%포인트 상승하였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도 2015년말 96.0조원에서 2026년 1/4분기말 405.7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고연령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도 21.6%에서 37.0%로 상승하여 금융 측면에서도 자영업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그림 III-10).

그림 Ⅲ-10. 고연령[1] 자영업자 규모 및 비중[2] 추이



주: 1) 60대 이상
2) 전체 자영업자 수 및 대출 대비 고연령층 비중
3) 각 연도 8월 기준(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자료: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연령별 자영업자의 주력 업종은 상이

한편 자영업자의 주력 업종이 연령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경우 부동산업이 가장 높은 비중(39.4%)을 차지하는 반면, 30대 이하 청년층의 경우 도소매업 종사 비중이 3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업 종사 비중은 높아지는(30대 이하 9.2% < 40대 18.6% < 50대 26.9% < 60대 이상 39.4%) 반면, 도소매업 종사 비중은 낮아지는(30대 이하 35.3% > 40대 26.0% > 50대 19.3% > 60대 이상 14.9%) 경향을 보였다.

표 Ⅲ-2. 자영업자 연령별[1] 종사 업종 분포[2]

(%)

순위	청년층		고연령층	
	업종	비중[3]	업종	비중[3]
1	도소매	35.3	부동산[4]	39.4
2	기타서비스[5]	29.2	도소매	14.9
3	숙박음식	12.3	기타서비스[5]	12.4
4	부동산[4]	9.2	운수창고통신	9.0
5	건설	4.0	숙박음식	8.2
6	운수창고통신	3.7	제조	5.5

주: 1) 사업자 대표 연령 기준. 청년층은 30대 이하, 고연령층은 60대 이상을 의미
2) 2026년 4월 가동 개인사업자 수 기준
3) 연령별 총 사업자 수 대비 각 업종 사업자 비중
4)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합산
5) 도소매, 부동산, 숙박음식, 운수창고통신, 대리중개도급업 이외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교육, 여가, 개인서비스 등) 합산
자료: 국세청

라. 재무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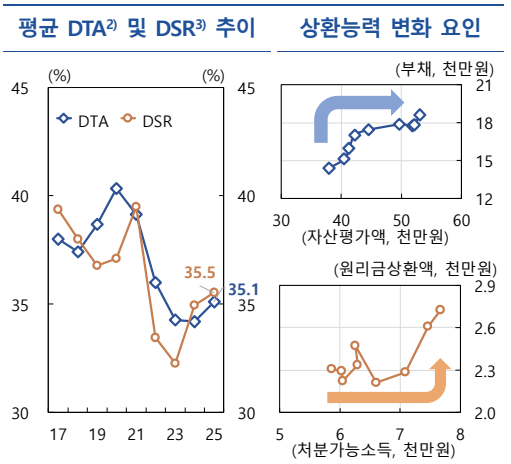
자산보다 소득 측면에서의 상환능력 약화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자산과 소득 측면에서 평가[16]한 결과,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코로나19 이후 대출 증가와 금융여건 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측면에서는 2020년중 대출 급증으로 평균 부채/자산 비율(Debt

16 가계부채DB에는 차주의 보유 자산과 사업자대출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종사상지위가 자영업자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였다. 자산(저량) 측면에서는 총부채 금액을 자산평가액(자산 형태별 환금성을 고려한 회수율 적용)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부채/자산 비율(DTA)을 통해, 소득(유량) 측면에서는 원리금상환액을 처분가능소득(이자비용 포함)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평가한다. 두 지표 모두 값이 커질수록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DTA와 DS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5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안정 현안 분석> 「가계부채 부실위험가구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을 참고하기 바란다.

to Asset Ratio, 이하 'DTA')이 상승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자산평가액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소득 측면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낮은 대출금리 지속 및 팬데믹 직후 소득 증가에 힘입어 평균 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이 큰 폭 하락하였으나, 2023년 이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DSR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였다(그림 III-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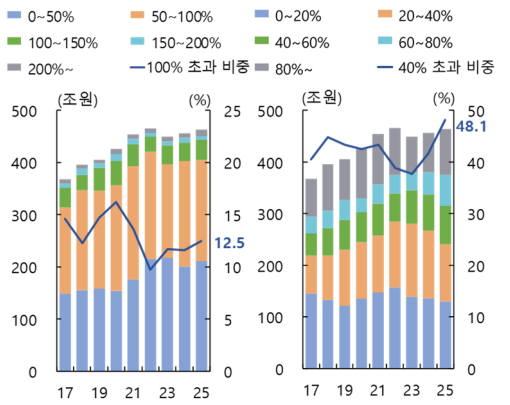
그림 Ⅲ-11. 자영업 가구의 평균 채무상환능력[1] 변화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연도 기준으로, 유량(소득, 원리금상환액 등)은 전년, 저량(자산, 부채 등)은 당해 3월말 기준
2) 자산별 환금성을 고려한 자산평가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3) 처분가능소득(이자상환액 포함)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한편 상환부담이 높은 가구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자영업 가구의 DTA 및 DSR 수준별 금융부채 분포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채무상환부담이 높은 가구의 비중이 2023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산 측면에서는 총부채가 보유자산평가액을 상회(DTA 100% 초과)하는 자영업 가구의 비중(금융부채 기준)이 2022년 3월말 9.7%까지 하락하였다가, 2025년 3월말 12.5%로 상승하였다. 소득 측면에서는 연간 처분가능소득(이자비용 포함)의 40%가 넘는 금액을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DSR 40% 초과)하는 자영업 가구의 비중이 2022년 37.6%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2024년 48.1%로 높아졌다(그림 III-12).

그림 Ⅲ-12. 상환부담별 자영업 가구 금융부채 분포[1]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연도 기준으로, 유량(소득, 원리금상환액 등)은 전년, 저량(자산, 부채 등)은 당해 3월말 기준
2) 자산별 환금성을 고려한 자산평가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3) 처분가능소득(이자상환액 포함)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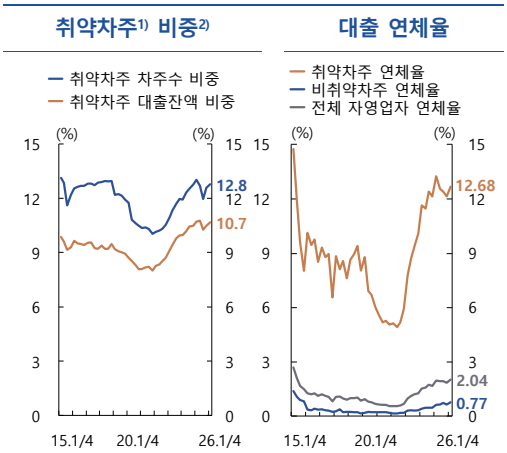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취약 자영업자 증가 지속

가계부채DB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차주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차주[17](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 차주)의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최근 증가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취약차주 수 비중은 2021년 4/4분기말 10.0%에서 2026년 1/4분기말 12.8%로 상승

[17] 취약차주는 다수의 금융기관 혹은 업권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혹은 저신용 등급인 차주를 의미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계대출 차입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차입 업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다중채무자로 분류한다.
[18] 취약 자영업자 차주 수는 2021년 4/4분기말 27.4만명에서 2026년 1/4분기말 40.9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중 취약 자영업자의 보유 대출잔액은 74.7조원에서 117.0조원으로 늘어났다.

하였으며, 동 기간중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도 8.0%에서 10.7%로 높아졌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2022년 이후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4분기말 0.56%에서 2026년 1/4분기말 2.04%까지 상승하였는데, 동 기간중 비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0.16%에서 0.77%로 0.61%포인트 상승에 그친 반면, 취약차주 연체율은 4.93%에서 12.68%로 큰 폭 상승(+7.75%포인트)하여 비취약차주와의 연체율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그림 III-13).

그림 Ⅲ-13.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 및 대출 연체율



주: 1)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혹은 저신용 차주
2) 전체 자영업자 차주 수 및 대출 대비 취약차주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이를 종합하면, 최근 10년간 자영업 부문에서는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경영실적 차별화, 부동산업 중심의 자금배분 집중, 고연령 자영업자 확대, 소득 측면에서의 상환능력 약화 및 취약차주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4)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앞서 살펴본 자영업 부문의 구조 변화는 자영업자의 수익성과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금융기관 익스포저의 질적 변화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영업 구조 변화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였다(그림 III-14).

그림 Ⅲ-14. 자영업 구조 변화와 금융안정 리스크

자영업 구조 변화		금융안정 리스크
시장	• 비대면·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 • 업종별 경영성과 차별화	영세·대면서비스 자영업 부실위험 증대
산업	• 자영업자의 높은 부동산업 종사 및 대출 비중 • 부동산 집중에 따른 자금배분 효율성 저하	부동산업 자영업자 리스크 증대
연령	• 청년층 자영업 진입 감소 및 비중 하락 • 고연령 자영업자 수 및 금융부채 비중 확대	고연령 자영업자 관련 비은행 익스포저 부실 가능성
재무	• 소득 측면에서의 상환능력 약화 • 코로나19 이후 취약 자영업자 증가 지속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우려

가. 영세·대면서비스 자영업 부실위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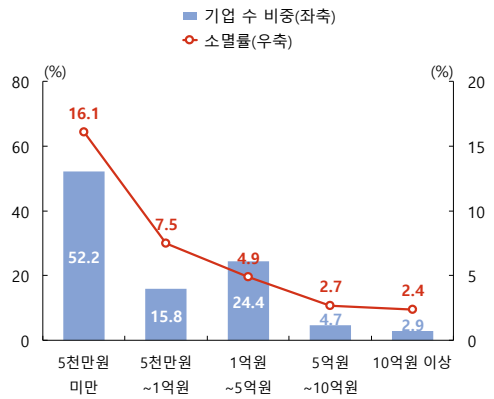
영세 자영업자의 잠재 부실위험 현재화 가능성

온라인 소비 확대 등 시장구조 변화로 인해 서비스업 시장에서 대형 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이 미흡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매출 부진이 심화[19]되면서 부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폐업하거나 1년 이상 매출액 또는 종사자가 없는 실질적 소멸 상태로 전환되는 비율(이하 '소멸률')을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연매출액 5천만원 미만 영세

[19] 정희완 외(2025)는 기업통계등록부 마이크로데이터(국가데이터처)를 통해 2015년 매출액 상·하위 20% 자영업체의 매출 변화를 추적한 결과, 점포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온라인소비 비중이 높아질수록 매출 성장률 격차가 확대된다고 분석하였다.

자영업자의 2023년 소멸률은 16.1%로, 매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52.2%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폐업 이후 이들의 소득여건 악화 및 그에 따른 상환능력 저하가 자영업 부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III-15).

그림 Ⅲ-15. 매출 규모별 개인사업자 소멸률[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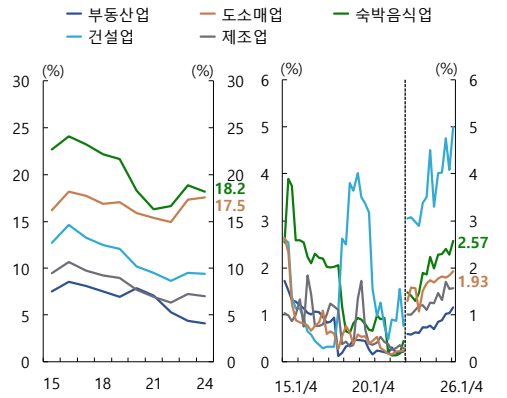


주: 1) 2023년말 기준
2) 폐업하거나 1년 이상 매출액 및 근로자가 없는 기업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기업생멸행정통계)

대면서비스업의 폐업 확대 및 연체율 추가 상승 가능성

업종별로는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 등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집중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추가 부실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숙박음식업 및 도소매업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2024년말 18.2% 및 17.5%로, 2015년 이후 여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또한 이들 업종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2026년 1/4분기말 현재 각각 2.57% 및 1.9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III-16).

그림 Ⅲ-16. 업종별 자영업자 폐업률 및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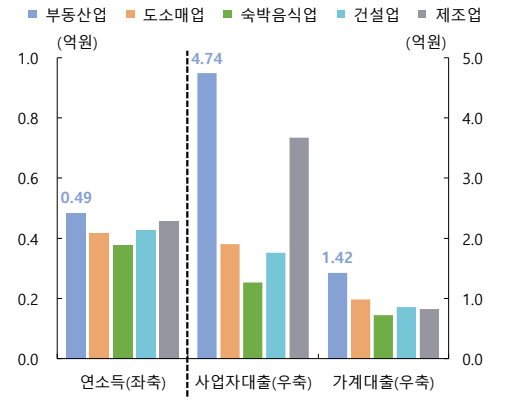
주: 1) 2023년 이후 가계부채DB의 기업대출 업종 관련 정보 확충으로 시계열이 단절
2) 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기준(가계대출 불포함)
자료: 국세청,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나. 부동산업 자영업자 리스크 증대

부동산업 자영업자의 높은 채무부담 지속

부동산업으로의 자금배분 집중은 부동산업 자영업자 차주의 높은 채무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4분기말 부동산업 자영업자 차주의 평균 연소득은 0.49억원으로, 여타 4개 주요 업종(도소매, 숙박음식, 건설, 제조업) 차주의 평균 소득(0.42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업 자영업자 차주의 평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4.74억원 및 1.42억원으로, 여타 주요 업종 평균(각각 2.15억원, 0.85억원)의 각각 2.2배 및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그림 III-17).

그림 Ⅲ-17. 업종별 자영업자 평균[1] 소득 및 대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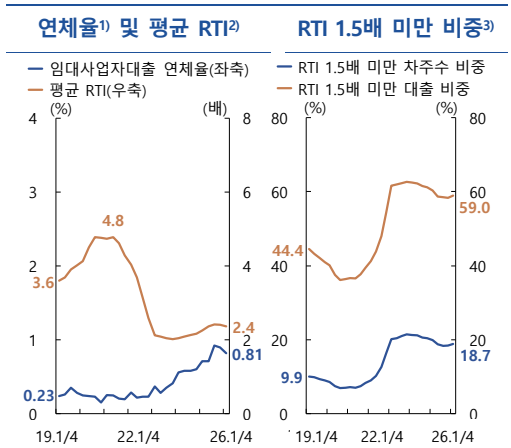


주: 1) 업종별 자영업자 차주당 평균 기준
2) 업종별 사업자대출 및 동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의 상환여력 약화

특히 부동산업 자영업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20]의 경우,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임대소득 대비 상환여력이 약화되고 대출건전성도 저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연체율은 2019년에서 2022년말까지 대체로 낮은 수준(19년 1/4분기말 0.23%)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6년 1/4분기말 0.81%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중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의 평균 이자대비 임대소득 비율(이하 'RTI')은 2019년 1/4분기말 3.6배에서 2021년 2/4분기말 4.8배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26년 1/4분기말 2.4배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RTI가 규제 수준인 1.5배를 하회하는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가 전체의 18.7%를 차지하고, 이들이 전체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59.0%를 보유하고 있어, 상업용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관련 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III-18).

그림 Ⅲ-18.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의 건전성 추이



주: 1)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기준(가계대출 불포함)
2) 차주별 연간소득을 임대소득(분자)으로 간주하고, 차주별 사업자대출 잔액에 분기별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잔액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비용(분모)을 추정
3) 전체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 차주수 및 대출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다. 고연령 자영업자 관련 비은행 익스포저 부실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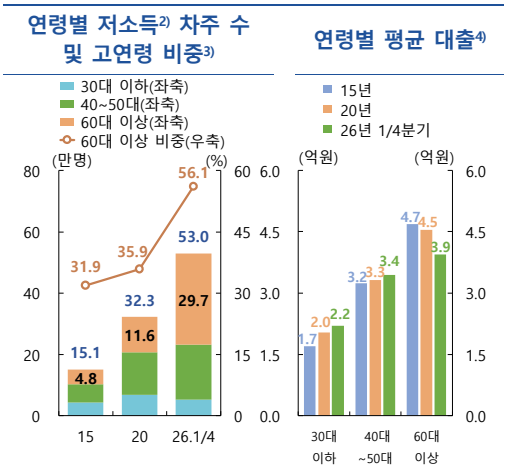
고연령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 취약

60대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는 여타 연령대에 비해 소득 기반이 취약한 반면 부채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와 은퇴 이후 자영업 진입 등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취약성이 누증되고 있어 경영여건 악화 시 상환능력이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 자영업자 차주(53.0만명) 중 56.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60대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 차주가 15.1

20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상 부동산업(L68)은 부동산임대(L6811), 부동산개발·공급(L6812), 부동산관리(L6821), 부동산중개자문·감정평가(L6822)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업 개인사업자 수의 93.8%(24년말 총 252.4만개 중 236.7만개, 국세통계 기준), 부동산업 개인사업자대출(국내은행 기준)의 96.1%(25년말 163.6조원 중 157.2조원)를 차지한다.

만명에서 53.0만명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 중 고연령 차주의 비중도 31.9%에서 56.1%로 상승하였다. 반면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 대출 규모(26년 1/4분기말 3.9억원)는 과거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청년층(2.2억원) 및 장년층(3.4억원) 자영업자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대비 채무부담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III-19).

그림 Ⅲ-19. 연령별 저소득 차주 수 및 평균 대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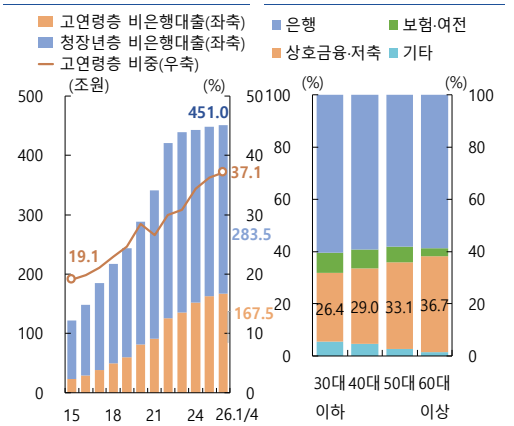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2) 연도별 전체 차주 중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차주
3) 연도별 저소득 자영업자 차주 중 60대 이상 비중
4)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합산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고연령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익스포저 확대

비은행권의 고연령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 중에서도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이 2015년말 23.3조원에서 2026년 1/4분기말 167.5조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에서 고연령 차주가 보유하는 비중이 동 기간중 19.1%에서 37.1%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특히 2026년 1/4분기말 기준으로 고연령 자영업자가 보유한 전체 대출의 36.7%(비은행 대출의 88.8%)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대내외 충격 등으로 인해 고연령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될 경우, 관련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III-20).

그림 Ⅲ-20. 연령 및 금융업권별 자영업자 대출 비중



주: 1)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 중 고연령 차주가 보유한 대출 비중
2) 26년 1/4분기말 기준 연령별 자영업자 대출의 금융업권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라.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우려

자영업자 연체율은 금리요인에 가장 크게 영향받아 변동하나, 정책요인은 취약차주에만 유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2023~24년중 금융긴축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취약차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향후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거나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될 경우, 자영업자 연체율이 재차 큰 폭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의 변동 요인을 설명하는 모형을 취약차주와 비취약차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금리 및 경기 요인은 모든 차주군에서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취약차

주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리 상승(금리 요인)과 서비스업 경기 둔화(경기 요인)는 시차를 두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동일한 수준의 금리 및 경기 변화에 대해서는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더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은 지원기간중 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 상승을 유의하게 완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I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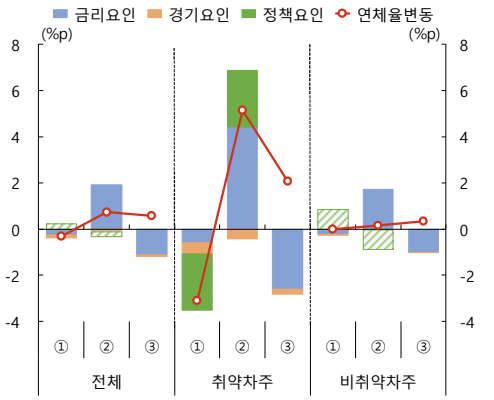
표 Ⅲ-3.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모형 추정 결과[1)]

종속변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설명변수[2)]	전체 자영업자	취약 차주	비취약 차주
대출 연체율(-1)[3)]	0.8315***	0.6266***	0.9022***
중소기업대출금리[4)](-1)	0.1632***	0.8398***	0.0853***
서비스업생산증가율[5)](-2)	-0.0142**	-0.1193***	-0.0021
코로나 지원정책 더미[6)]	0.0365	-0.9092*	0.0837*
상수항	-0.4429***	0.3258	-0.3270***
Adj. R^2 (D.W.)	0.97 (2.38)	0.84 (2.07)	0.97 (1.94)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설명변수 변수명 옆 ( )는 시차(분기)를 의미
3) 종속변수(전체·취약·비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의 전기 값
4) 예금은행 평균 중소기업대출 금리(잔액 기준)
5) 서비스업생산지수(경상)의 전기대비 증가율
6) 2020년 2/4분기~2022년 3/4분기 기간 더미변수
자료: 한국은행 시산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의 변동요인을 금리 흐름을 기준으로 ① 저금리기(2020년 1/4분기 ~ 2022년 2/4분기), ② 금리인상기(2022년 3/4분기 ~ 2023년 4/4분기), ③ 금리인하기(2024년 1/4분기 ~ 2025년 4/4분기) 등 세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취약차주와 비취약차주 모두 금리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중 금융지원 정책으로 인해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원정책 종료 및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연체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그림 III-21).

그림 Ⅲ-21.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변동요인 분해[1)2)3)]



주: 1) ① 저금리기(2020년 1/4분기 ~ 2022년 2/4분기)
② 금리인상기(2022년 3/4분기 ~ 2023년 4/4분기)
③ 금리인하기(2024년 1/4분기 ~ 2025년 4/4분기)
2)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기대부호와 반대로 추정된 경우 빗금으로 표시
3) 전기 연체율로 설명되는 동태누적 효과를 금리, 경기, 정책 등 각 요인으로 분해하여 포함
자료: 한국은행 시산

25년 추경을 통한 내수 진작 및 새출발기금 확대의 자영업자 소득 증가 및 부실 완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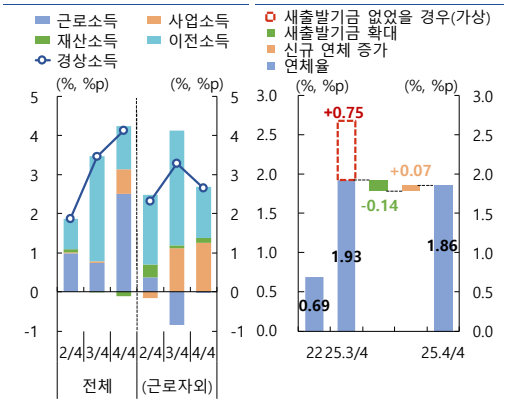
다만 2025년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21], 새출발기금 확대[22] 등 정책들은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과 부실 완화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하반기중 가구 전반의 이전소득이

[21] 민생회복 소비쿠폰(25년 7~10월중 지급, 11월말까지 사용)은 사회수혜금 항목으로 가구의 이전소득을 직접 증가시키며, 쿠폰 사용처가 영세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소비지출 증가는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22] 금융위원회는 추경예산(7천억원)을 활용하여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24년 12월 ~ 25년 6월 사업영위자 추가)하고, 저소득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원금감면율 확대,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등)하였다(9월 22일 시행).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자영업자 등 근로자외 가구의 경우 사업소득도 상당폭 증가[23]하였다. 한편 새출발기금의 정책 효과를 추산[24]한 결과, 새출발기금은 출범(22년 10월) 이후 2025년 3/4분기말까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폭을 약 0.75%포인트 낮추었으며, 지원 확대를 통해서는 2025년 4/4분기중 연체율을 추가로 0.1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III-22).

그림 Ⅲ-22. 2025년 추경이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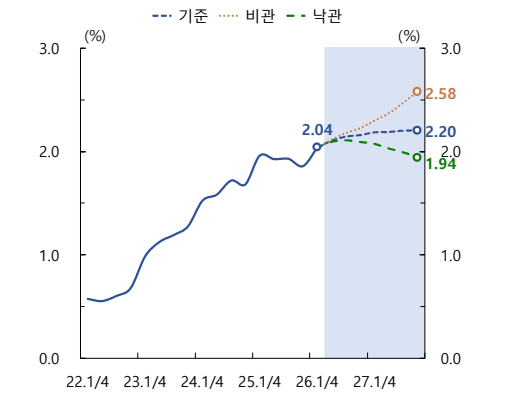


주: 1) 전년 전체 경상소득 대비 증가율
2) 붉은색 점선은 새출발기금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분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가계동향조사),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향후 복합충격 발생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 압력 증대

앞서 추정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모형을 활용하여 향후 대출금리 및 서비스업 경기에 대한 시나리오별 연체율을 추정한 결과, 최근의 금리상승 흐름과 과거 평균 수준의 서비스업 경기가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하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다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국내 금융여건이 보다 긴축적으로 전환되고 서비스업 경기도 다시 둔화되는 비관 시나리오하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III-23).

그림 Ⅲ-23. 시나리오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1)



주: 1) 음영은 향후 대출금리, 서비스업 경기 등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연체율을 추정한 기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23 하정석 외(2026)는 신용카드 매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이 비사용처에 비해 2.91% 정도 더 증대되었으며, 그 증가 규모를 약 2.8조원으로 추산하였다.

24 본고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6년 2월 26일)에서 발표한 새출발기금 실적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다. 2025년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실적은 신청 27.7조원(17.5만명), 약정 9.8조원(약 11.4만명)이며, 제도개선 시행 이후(4/4분기중) 월평균 신청 및 약정 채무액(각각 9,089억원, 5,072억원)이 종전(25년 9월 이전) 대비 각각 31% 및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자영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방향

자영업 부문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그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영세·대면서비스업, 부동산업, 고연령 자영업자 및 취약차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금리 여건 및 서비스업 경기 변화에 따라 빠르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정책대응은 취약부문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금융지원 및 재기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차주의 상환능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선별적 지원, 자영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 취약 익스포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중장기 구조전환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 사례[25]에서도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직접적인 금융지원뿐 아니라 사업 지속 가능성 평가, 경영개선 지원, 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을 함께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병행

먼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지원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선별적 지원체계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 시 차주의 연체 여부뿐 아니라 소득 흐름, 업종 전망, 보유자산, 다중채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되, 상환능력이 크게 훼손된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재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조정이 부실의 단순 이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컨설팅, 재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질서 있는 사업 정리와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26] 특히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기반이 취약하고 부채부담이 큰 만큼, 금융지원 이외에도 사회안전망, 노후소득 보완 등을 포괄하는 지원책이 바람직하다.[27]

나. 디지털 전환과 경영역량 제고를 통한 자영업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의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28]과

25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주요국의 자영업자 구조전환 및 재기 지원정책 사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26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재창업·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추가경정예산 494억원을 반영하여 점포철거비 1만개사, 경영개선·재창업 등 재기사업화 250개사를 추가 지원하고,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재기사업화 연계지원 사업도 신설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5월 28일).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8월 14일).

27 최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간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년연장은 임금근로 기간의 확대를 통해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축소시켜 고연령층의 생계형 자영업 진입 수요를 일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8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효과를 충청남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이민정 외(2024)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된 소상공인은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보다 25.6% 더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은 키오스크, 로봇, SNS 활용 등 업장 경영 관련에 집중되어 있으나 실제 매출 증가는 온라인 주문·배송, 재료 구입 등 상품 관련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경영역량 확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29] 특히 디지털 전환 지원은 디지털 기반 경영 인프라 도입을 지원하되, 단순한 시스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모델 개선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권분석, 가격전략, 상품 구성, 온라인 마케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의 변화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플랫폼 이용 확대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과 광고비 증가 등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상생방안 마련 등의 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30]

다. 생산성 중심의 자금배분 유도 및 취약 익스포저 관리

자영업 부문의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이 성장 가능성과 생산성 제고 효과가 높은 부문으로 원활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업종별 수익성, 현금흐름, 담보가치, 금리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사업자대출 심사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능력, 공실 위험, 부동산 가격 변동 가능성 등을 반영한 리스크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담보 중심 심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금융과 보증지원의 경우에도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성장지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는 만큼,[31] 향후 지원체계는 기술·지식 기반 서비스업에서 혁신적인 자영업체가 성장하여 기업화·대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특화산업, 고부가가치 생활서비스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하는 방향[32]으로 더욱 발전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고연령 자영업자와 비은행권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업종, 담보유형, 연체율, 다중채무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고위험 차주군에 대한 충당금 적립, 담보평가 및 여신심사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 금융여건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건전성 관리와 구조전환 기반 구축

자영업자 대출은 금리와 서비스업 경기 변화에 민감한 만큼, 금융여건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 금융기관은 취약차주, 부동산임대업 차주, 고연령 차주 등을 중심으로 잠재 부실 규모를 점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연체 발생 이전 단계에서 채무조정이나 상환조건 변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영업 사업단계에 따라 금융, 산업, 고용 및 복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

---

29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10만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동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1:1 현장방문 교육 확대, 플랫폼사 협업교육 신설 등 현장·실무형 교육 강화를 포함한다(중소벤처기업부, 25년 3월 17일).

3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2024년 11월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방안은 거래액 구간별로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여 하위 구간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4년 11월 14일).

31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9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특화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 7개 분야 23개 사업을 제시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4년 12월 27일).

32 안수지(2025)는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자영업자도 디지털·친환경·문화콘텐츠 등 미래지향적 영역에서의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저 창업 단계에서는 상권·업종·수익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경영개선, 디지털 전환, 금융관리, 세무·노무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체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폐업 단계에서는 신속한 정리 절차와 재창업·재취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영업자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장기간 부실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구조전환 지원은 경영진단·컨설팅, 회생가능성에 따른 지원방향 설정, 전직·재취업 과정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추진될 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이상 종합하면, 향후 자영업 정책은 기존의 금융지원 및 재기지원 체계를 토대로 선별적 지원과 자영업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은 건전성 관리와 차주별 맞춤형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정책당국은 디지털 전환, 생산성 제고, 자금배분 효율화, 구조전환 지원을 통해 자영업 부문의 복원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영업 부문이 단기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자영업자 구조전환 및 재기 지원정책 사례

향후 자영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경영개선, 채무조정, 폐업·재기 지원,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적 여건과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정책의 중점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자영업자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구조전환 지원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 일본, 유럽(EU)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미국

미국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Chapter 11 내 소기업 채무자를 위한 간소화된 회생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 제도인 Subchapter V of Chapter 11은 기존 파산 절차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 소기업 채무자가 신속하게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채무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동 제도는 일정 요건 하에서 채권자 동의가 일부 확보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기능을 가진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 후 90일 이내에 회생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향후 3~5년간의 가처분소득을 채무상환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평가받는다.[1] 다만 사업의 수익모델이 불명확하거나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Chapter 7 (bankruptcy)에 따른 청산[2]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제도는 사업의 계속 가능성과 채무조정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회생 가능한 사업체와 청산이 필요한 사업체를 구분하는 데 특징이 있다.

일본

일본은 지역 단위의 경영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개선, 재생 및 재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은 지역별 공적 경영지원 거점인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中小企業活性化協議会)'를 통해 수익력 개선지원, 프리재생·재생지원, 재도전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금융기관, 컨설팅회사, 상공회의소 등 전문기관을 '인정경영혁신등지원기관(認定経営革新等支援機関)'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가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일본의 특징은 사업의 위기단계와 회생 가능성에 따라 지원 방향을 구분한다는 점이다.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 전에는 수익력 개선

[1] U.S. Department of Justice , United States Trustee Program, "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 of 2019 / Subchapter V"에 따르면 필요시 법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채무자의 재무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 U.S. Courts, "Chapter 7 - Bankruptcy Basics"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청산(liquidation)하여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를 규정한 법적 제도이며 법원이 지정한 파산전문인(trustee)이 청산 절차를 관리한다.

[3] **일본 지역단위 자영업자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모집방식	사업배정방식	지원내용
수익력 개선지원	수시 접수형	인정경영혁신등기관 및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의 판단에 따라 배정	단기 수익개선 지원, 자금계획 수립 및 실행 관리
조기 경영개선계획 책정지원(V업)			
프리재생·재생지원			재생계획 수립비용 보조, 채권자와 합의 형성 및 계획 이행 모니터링
경영개선계획 책정지원(405사업)			
재챌린지 지원			폐업, 보증채무 정리, 개인파산 회피형 재출발 지원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일본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 홈페이지

지원 등을 통해 경영과제 진단, 자금계획 수립 및 실행 관리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가 사업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점검하여 지원 방향을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리재생·재생지원을 통해 채권자와의 재생계획 합의를 유도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낮거나 재생계획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도전 지원을 통해 원활한 폐업, 보증채무 정리 및 재출발을 돕는다. 이러한 체계는 자영업자의 부실을 단순히 이연하기보다는 경영개선, 회생, 폐업·재도전을 단계적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유럽 (EU)

유럽은 자영업자와 비표준 고용 종사자가 사회보장제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사회보호 접근성 제고를 권고하고 있다. EU는 2019년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보호 접근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Council Recommendation of 8 November 2019 on access to social protection for workers and the self-employed)」를 통해, 임금근로자 중심의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자영업자와 비표준 고용 종사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동 권고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법적 가입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 수급 가능성, 급여의 적정성, 제도의 투명성 등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강조하였다.

회원국별로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구조전환 및 재기 지원 측면에서는 폐업 또는 소득 단절 이후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 프랑스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 ATI (Allocation des travailleurs indépendants)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며, 2022년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존속가능하지 않은 활동 종료[4]도 수급 사유에 포함하였다. 스페인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편입을 강화하고, 직업상 재해·질병 등 전문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였다. 다만 EU 내에서도 회원국별 제도 설계와 가입률에는 차이가 커, 자영업자 사회보호 수준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5]

시사점

주요국 사례를 종합하면, 자영업자 지원정책은 단순한 금융지원보다 사업 지속 가능성 평가, 경영개선 지원, 채무조정, 폐업 및 재도전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과 결합될 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미국은 법원 중심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과 청산을 구분하고, 일본은 지역 기반 경영진단 체계를 통해 수익성 개선, 재생지원, 재도전 지원을 단계적으로 연계한다. EU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연금 등 사회보호 접근성 확대를 강조한다.

앞으로 자영업자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이를 폐업 및 회생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체계 마련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자영업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6]가 있으며, 이를 위해 EU의 권고안과 같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참고할 수 있겠다.

[4] 프랑스 노동법상 자영업 활동에서 신고한 소득이 최소 30% 이상 감소한 경우 경제적으로 존속가능하지 않다고 보며, 이 경우 2022년 이후부터 자영업자가 사업 종료를 신고하면 법원의 청산 또는 회생절차 없이도 실업보호를 받을 수 있다.
[5]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9%, 0.3%, 10~15% 수준이다.(European Commission, 2025)
[6] 소상공인진흥공단은『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월 보험료의 50~80%를 가입 후 5년간 지원한다.

주요 참고문헌

김경민(2022),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재생·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 KOSI 중소기업 포커스, 제22-05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주영(2025),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현상유지형 지원에서 성장형 지원으로의 전환”, 한국경제인협회

박충렬(2023),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NARS 입법·정책 제139호, 국회입법조사처

안수지(2025),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연구보고서 제25-19호, 국회미래연구원

오삼일·황수빈·유민정·이종하(2021),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BOK 이슈노트, 제2021-11호

오상봉(2025), “자영업과 자영업정책”, 정책자료 제2025-09호, 한국노동연구원

이민정·김양중(2024),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제26권 제4호

이재호·정동재·안병탁(2025),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5-12호

이진국·한요셉·김지운·오윤해·김미루·배준형(2020),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연구보고서 제2020-06호, 한국개발연구원

장근호·최기산·서재용·이형석·김진영·김용수(2025),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은행 중장기 심층연구

정선영·최준·안병탁(2025),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BOK 이슈노트, 제2025-18호

정희완·정민수·강보민·이영호·안지민(2025),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BOK 이슈노트, 제2025-19호

하정석·양준빈·김남주·류정석·조인식(2026),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BOK 이슈노트, 제2026-13호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 2025.6, 2025.12)

일본 중소기업청, “中小企業活性化協議会:収益力改善·再生支援·再チャレンジ支援(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수익력개선·재생지원·재도전지원)”, https://www.chusho.meti.go.jp/keiei/saisei/index.html

일본 중소기업청, “認定経営革新等支援機関(인정경영혁신등지원기관)”, https://www.chusho.meti.go.jp/keiei/kakushin/nintei/

Eurofound (2024), “Self-Employment in the EU: Job Quality and Developments in Social Protectio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2025), “Access of non-standard workers and self-employed to the unemployment insurance”,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Poschke, M. (2018), “Wage Employment, Un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across Countries”, IGC Working Paper, F-32205-ETH-1

U.S.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Trustee Program, “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 of 2019 / Subchapter V”

U.S. Courts, “Chapter 7 - Bankruptcy Basics,” https://www.uscourts.gov/court-programs/bankruptcy/bankruptcy-basics/chapter-7-bankruptcy-basic